

글로벌 한인 통일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 미주동포를 중심으로*

남성욱**

이현주 정유석 박용한 조평세 곽은경***

- | | |
|-------------------------------------|---------------------------|
| I. 문제제기 | IV. 글로벌 한인 통일네트워크
구축방안 |
| II. 재외동포들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실태 | V. 결론 |
| III. 사례연구: 미주동포들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와 함의 | |

국 문 초 록

과거 1세대 재외동포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정착하는데 급급하였으나 이제 2~3세대에서는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이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재외동포들의 자긍심과 조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재외동포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의 주요한 현상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및 유럽 등지에서 통일의 전령사 역할을 한다는 것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역할을 분석했다. 또한 재외동포들을 본국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형성방안과 새로운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본국의 통일 정책과 담론 형성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미주 동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대북,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역할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계적으로 도출하였다. 미주동포들은 통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표명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통일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통일 역할과 활동 방향성을 모색하는 작업은 주재국의 여론 선도층을 설득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의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주제어: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미주동포 통일의식, 글로벌 한인통일네트워크, 통일공공외교

* 본 연구는 2015년 고려대 인문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교수

논문 및 저서: 2016.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개정판)』, 파주: 한올아카데미, 외 다수.

*** 5명의 공동저자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I. 문제제기

‘재외동포’라는 단어의 느낌은 복합적이고 이중적이다. 일면 차별, 고난, 시련극복이라는 도전적 의미가 있다.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산이라는 미래지향적 의미도 중첩된다. 20세기 전후에 한반도가 직면한 국제정치의 제국주의는 한민족으로 하여금 디아스포라(국제유민, 離散)의 삶을 강제했다. 국권과 주권을 지지할 힘이 부족했던 한반도의 정치체제는 국민들의 이주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또한 많은 한국인이 신세계에 대한 고단한 현실을 타개한다는 개척정신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및 중동 국가로 이주했다.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거쳐 분단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현재 한국의 국력은 신장했고 해외동포들도 거주국에서 정착에 성공했다(미주중앙일보, 2015/8/5).¹⁾

한편 한류는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외국인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재외동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모국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하는 긍정적 선순환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동아일보, 2015/8/5).²⁾ 1세대가 강제징용과 이산의 아픔으로 상징되는 데 대해, 2세대는 악착같이 일어난 이방인이다. 이제 3세대들은 한민족의 자부심을 가지는 미래지향적 개척자들이다. 특히 이제 다음세대들이 거주 국가의 유력인사들과 혼인 등으로 배우자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본인들 역시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동포

1) 2015년 8월 4일 생일을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기업가들의 상품을 전시하는 ‘백악관 전시의 날’ 행사에서 한국계인 정한나 스푸라우텔 창업자로부터 곰인형을 받는 사진은 매우 인상적이다.

2) 2015년 8월 현재 사할린국립종합대 한국어학과의 85%가 非韓인이다. 7월 1일 열린 ‘사할린 요리 콘테스트’ 참가자 18명 중 12명이 러시아인이다. 한국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3세대는 자녀들에게 사할린 한인 역사와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가르친다. 3세대의 이름은 대부분 러시아식이지만 자녀들에게는 한국이름을 지어 준다고 한다.

들의 위상 또한 달라져 새로운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2015년 8월 미국 연방의회에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는 한국계 남편을 둔 그레이스 명(민주 뉴욕, 중국계 미국인) 하원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조선일보, 2015/8/6).

또한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재외동포들의 자긍심과 모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회원국이 되면서 재외동포들과 모국과의 관계도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 기업들은 모국과 사업적 연계를 가질 경우 경제적 이득을 배가할 수 있게 되었다(재외동포신문, 2015/10/26).³⁾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은 한류 확산 등 문화적 유대감과 함께 한국경제의 해외 경쟁력 확대 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재외동포신문, 2015/10/19).⁴⁾ 재외동포들은 모국이 분단되었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실망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고심한다. 재외동포들이 원초적인 수구지심(首丘之心)의 본능적 관점에서 고심하고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바로 한반도 통일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먼저 재외동포들이 국제정치의 주요한 현장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및 유럽 등지에서 통일의 전령사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다양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인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정부의 해외동포에 대한 통일 메신저 정책에 활용할 수

3)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박기출, 이하 월드옥타) 차세대 모국방문교육이 2015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차세대 모국방문 교육에는 23개국 48개 지회에서 100여 명이 넘는 재외 동포 청년 기업인이 참가하였다.

4) 월드옥타(World-Okta) 주최 '제2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10월 19일 싱가포르 센토사 리조트 호텔에서 개최식을 열고 막을 올렸다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동포 중 일차적으로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미주동포들의 대북, 통일 인식과 통일을 위한 역할 수행 및 대정부 지원 관련 인식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최근 재미동포들의 지역 내 위상 제고 및 역할이 미국 주류사회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민족 외부, 즉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을 고려하면 미주동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주동포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도출된 미주동포들의 통일 인식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외동포들을 모국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방안과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통일 정책과 담론 형성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재외동포들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실태

1.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통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014.5 일부개정)’은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결국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성된다. 재외동포에 대한 범위는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외동포 중 일부는 여전히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지 영주 및 시민권을 획득하여 선거에 참여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2015년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보다 약 16만 명 증가한 718만4,872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외교부, 2014b: 43).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2년에 한 번 전 세계 동포수를 집계한다.⁵⁾ 이는 2013년에 집계한 701만2,917명보다 약2.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5) 현황 자료는 외교부에서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 작성한 공관별 재외동포현황을 취합, 정리(2014.12월 기준)한 것으로서 거주국의 인구 관련 통계자료,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 공관 민원 처리기록 직접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치로 2년마다 갱신된다.

<표 1> 재외동포현황 총계

(단위: 명)

구분	2011	2013	2015	백분율	전년 대비 증감률(%)	
총계	7,167,342	7,012,492	7,184,872	100		
동북아	일본	904,806	892,704	855,725	11.9	-4
	중국	2,704,994	2,573,928	2,585,993	36.70	
	소계	3,609,800	3,466,632			
남아시아태평양	453,420	485,836	510,000			
북미	미국	2,075,590	2,091,432	2,238,989	31	7
	캐나다	231,492	205,993	224,054	3.1	8
	소계	2,408,490	2,297,425		32.76	
중남미	112,980	111,156	100,000			
유럽	656,707	615,847	620,000			
아프리카	11,072	10,548	11,000		9.8	
중동	16,302	25,048	25,000			

주1) 출처: 외교부, 2012; 외교부, 2014b

나라별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동포가 258만6천여 명(36%)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223만9천여 명(31.2%), 일본 85만6천여 명(11.9%), 캐나다 22만4천여 명(3.1%), 우즈베키스탄 18만6천여 명(2.6%), 러시아 16만7천여 명(2.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재외동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으로 재중 교민과 조선족동포를 포함해 총 250만 명의 동포가 거주한다. 전체 재외동포의 35.99%를 차지한다(외교부, 2014b: 14). 거주자의 자격을 보면 재외동포의 65.6%인 471만2천여 명이 외국 국적자(시민권

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 체류자 111만5천여 명(15.5%), △영주권자 108만1천여 명(15%), △유학생 27만7천여 명(3.9%) 순이었다(외교부, 2014b: 28).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거주국에 동시 다원적으로 정치,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민족성과 민족정체성은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ies)의 형태를 구성하여 확일적으로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해서 방향성을 확정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포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부합되어야 행동 방향을 정할 수 있다. 통일의 방향성과 행동성은 모국의 통일정책이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성 있게 동포사회에 접목되고 동포사회가 이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절실하게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통일운동에 동참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한반도 분단은 민족 내부의 분할인 동시에 냉전시대 국제정치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분단극복은 민족 내부와 외부의 두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민족 내부에서 한반도 통일은 단순한 분단의 극복이 아니라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남북한 간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중립적으로 여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부는 전쟁과 분단된 현실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으므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상실하였던 민족의 동질성과 전통을 오히려 더 잘 보존하고 있어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민족 외부는 국제정치적 측면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4대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강대국을 비롯해 181개국 720만 명의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과 남북한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서독 통일 당시 서독의 콜 수상 등 지도자들이 소련과 프랑스, 영국 및 미국 등을 어떻게 설득하여 통일의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였는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표 2>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및 주변 4대 강국 비율

순위	국가명	동포수	비율(%)
1	중국	2,585,993	35
2	미국	2,238,989	31.2
3	일본	855,725	11.9
4	캐나다	224,054	3.1
5	우즈베키스탄	186,186	2.6
6	러시아	166,956	2.3

주1)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과, 2014.12.

니콜라스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는 구별되는 존재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단일의 동질적인 국가민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박길성 외, 1996: 20~41). 재외동포들은 출신이 상이하고 구성원으로서 소수민족의 위치에 있더라도 본인들의 다양한 역할로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은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러한 초국적주의는 이민자들이 거주국에 완전히 동화되지 아니하고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동시적 발전과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특수한 현상이다. 다중적이고 동시적 관계들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족적 관계를 통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이민자들은 모국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모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기여한다(Basch, Shiller & Blanc, 1994). 통일의 국제적 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재외동포들은 모

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따라서 통일시대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의 한 축을 맡은 그룹이 재외동포들이다. 새로운 공공외교 주체로서의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정책과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접근모델이며,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에 출입할 수 있어 북한을 개방시키는 통일공공외교의 중요 행위자로 작용할 수 있다.

2. 재외동포들의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실태와 가능성

1)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실태

21세기 세계화의 심화와 인터넷 혁명의 지속으로 국경을 초월한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사람과 자본, 물류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까지도 세계화되어 명실상부하게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민족국가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속성인 폐쇄성(isolationism)과 지방성(localism)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하며, 전통적 민족네트워크의 독점성(monopoly)은 의미를 상실하였다(Guehenno, 1995). 21세기 민족네트워크는 폐쇄적 문화와 지리적 공간성을 탈피하여 포용성, 개방성, 다양성 및 미래지향성을 추구할 때 발전할 수 있다. 포용성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가진 민족구성원을 포용하는 것이고 개방성은 민족구성원의 다중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성은 이질적이면서도 동질적인 요소와 다양하면서도 상호연대가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래지향성은 영토에 기반을 둔 근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정보통신시대의 지식정보 사업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현상으로서 21세기 민족네트워크가 가져야 할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발행한 2015년 기준 재외동포단체는 169개의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의 자료를 취합

한 결과 총 3,172개다. 이중 한인회가 709개, 종교관련 단체 369개, 경제단체 243개, 문화단체 156개, 한글학교 154개, 언론사 124개, 예술단체 109개, 군 관련단체 99개 등이다(외교부, 2014a).

<표 3> 해외 통일 안보관련 단체 현황

구분	단체 현황	주요지역	비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3개 협의회, 31개 지회	전 세계 대사·총영사관 설치지역	헌법 92조, 민주평통법(1981)
재향군인회	13개 지회	미국, 유럽, 아시아	재향군인회법(1963)
자유총연맹	27개 지부	미국, 유럽, 아시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989)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0개 지부	미국, 호주, 중국	자율단체

주1)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과. 2014.7. 참고하여 정리

이들 단체 중에서 통일 안보관련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군 관련 단체, 자유총연맹 및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 92조에 규정된 민주평통은 전 세계 117개국에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43개 대사관 및 총영사관 개설지역에 협의회를 두고 있다.⁶⁾ 이와 동시에 협의회와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31개 지역에 산하 지회를 두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13개 지역에 해외지회를 두고 있다.⁷⁾ 해외지회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 일본, 아르헨티나, 독일, 브라질,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필리핀, 태국 등이다. 자유총연맹은 미국 등 전

6) 이하 민주평통 관련 공식 홈페이지 참조. (www.nuac.go.kr)

7) 이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관련 공식 홈페이지 참조. (www.korva.or.kr)

세계 27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미국은 뉴욕, LA, 워싱턴, 동남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화동 및 화남에 호주에는 대양주협의회 등 전체 10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⁸⁾

현재 해외의 통일운동은 민주평통이 주관단체로서 사실상의 해외 통일 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각종 군 관련 단체와 예비역 군 등으로 구성된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은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단체로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여 보수와 진보 사이에 중도 성향으로 남북한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단체 간에는 통일운동 수행과정과 대북통일 정책 추진 절차 등에 있어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⁹⁾

<표 4> 15~17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비율

구분	해외인원	전체 대비 비율	비고 (미주지역)
15기(2011.7~2013.6)	105개국 3,137명	0.000429%	1,312명
16기(2013.7~2015.6)	115개국 3,275명	0.000448%	1,423명
17기(2015.7~2017.6)	117개국 3,278명	0.000449%	1,641명

주1)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과, 2014.12.

8) 이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련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crc.or.kr>)

9) 민주평통은 국민의 통일여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자는 뜻으로 1981년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됐다. 특히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기구다. 민주평통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 하에 활동하고 있다.

2)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가능성 검토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의 3대 기본목표로 첫째,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둘째, 한민족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셋째, 동포 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 간 호혜적 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재외동포신문, 2004/11/9). 이 중에서 동포 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 간 호혜적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중 하나인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첫째, 한민족 재외동포와 모국, 그리고 거주국과의 삼각관계(Triangular Relationship)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¹⁰⁾ 일차적으로 모국인 한국과 재외동포와의 관계에서 모국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문화적·물적 지원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추구한다. 재외동포는 모국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참여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모색한다. 다음은 재외동포와 거주 국가와의 관계다. 거주국의 경우 이민자 집단에 대해 일정 수준의 사회적 배려를 통해 토착인과 이주민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거주 국가에서 각종 사회적 활동을 통해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국과 거주국의 관계는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사이에 두고 국가와 국가 간의 특수한 정치외교적인 관계로 설정될 수 있다. 결국 재외동포들은 한국과 거주국 간에 ‘물리 화학적 중개 및 연결’기능을 수행한다. 세계 181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명의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물적 자산으로서 평가된다. 다만 동포 개개인 간의 조직적 연계가 미흡하여 동포사회가 거주국에 한민족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 간의 시너지

10) 재외동포와 모국, 그리고 거주국이라는 삼각관계 속에서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에 관하여는 (Gabriel Sheffer, 2003) 참조

효과를 위해 네트워크화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들의 정치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주류사회 진출을 통해 한민족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바람직한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한인사회에 기반을 두고 정치권에 진입하는 정치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포사회의 권익증진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과의 관계에서 매개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 민족간부들은 중앙정부와 전국인민대표회의, 동북3성 민족자치 지역에서 조선족을 대표하는 정치활동을 하고,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양국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2015년 7월 16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하여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5/7/17).

셋째,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추어 재외동포와 모국이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재외동포들은 세계로 진출하여 최대 경제 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를 결성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또한 코리아타운과 같은 새로운 한민족의 경제문화 공간을 형성하고 역설적으로 경제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모국과 동포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적 의의를 갖는다. 중국 동북3성에서 조선족이 자치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비롯하여 북경, 천진, 청도, 단둥 등 한인 집거지역, 미국의 LA, 뉴욕 등의 코리아타운, 일본 동경의 신주쿠와 오사카의 코리아타운 등은 해외동포들의 경제적 거점이다. 미국 앨라배마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현대차 공장이 가동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취업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한민족 생활 공간은 한민족 문화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III. 사례연구: 미주동포들의 통일 의식 조사 결과와 함의

1.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해외동포들의 통일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미주지역을 선택하였다. 미주지역을 일차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선 동포들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다수이고, 이민역사가 오래되어 2~3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주류사회에 진출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임에 따라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주동포 1,000명을 대상으로 동포들의 통일 의식과 방향성을 확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 역할 의견조사” 제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¹⁾

본 조사는 미주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서면 조사 형식으로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처리과정으로 분석했다. 조사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회의와 검토를 거쳐 설계된,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크게 미주동포들의 통일 및 남북관계 인식과 미주 동포들의 통일정책 및 역할수행 인식 등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설문문항은 60개였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질문(7개 문항), 재외동포 대북

11)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표본추출방법은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이었다. 눈덩이표집은 전체 모집단을 파악하기 어렵고 원거리에 있는 재외동포라는 연구대상에 적합한 표집방법이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국외이주시기별, 해외이주사유별, 한민족 정체성에 따라 분류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통일 역할과 활동 방향성을 조사한 것은 조사대상자의 집단간 특성에 따른 재외동포의 통일정책에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식(8개 문항), 재외동포 통일인식(5개 문항), 남북관계 평가(5개 문항), 한국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평가(8개 문항), 남북관계 및 향후 통일 전망(4개 문항),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23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 재외동포의 역할 설문에서는 통일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동포들의 요망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정부의 재외동포 글로벌 한인 통일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부분이다.

본 조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달간 실시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 응답 후 우편으로 회수, 온라인 설문조사 기법 등을 활용했다. 자료 수집 기준 시점은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조사의 기획, 조사표 개발, 조사지침서 작성, 자료수집, 실사관리, 데이터 검증, 보고서 작성 및 공표 등은 (사)남북경제연구원이 전담하였으며, 설문지 코딩, 편집, 에디팅, 테이블 등 자료처리는 연구원의 주관 하에 IMCHILDS 심리상담소에서 실시하였다. 회신 및 응답된 설문지는 총 1,000부였다.

2. 조사결과 분석

1) 미주동포들의 통일 및 남북관계 인식

북한 정권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지원 대상(21.3%), 협력 대상(34.9%), 경계 대상(37.9%), 적대 대상(21.0%), 경쟁 대상(2.2%), 관심 없음(3.0%) 등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정권을 지원 혹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보다 경계 혹은 적대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문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을 묻는 질문에 북한 핵무기(31.9%), 북한 인권(25.3%), 북한의 폐쇄적 고립정책(23.1%), 김정은

의 공포정치(13.3%), 북한 식량난(5.1%), 기타(1.3%)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대상 지역인 미주지역에서의 북한에 대한 주 언론보도 내용인 북한 핵문제가 인권문제가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 북한정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안정적(0.15%)이라는 응답은 매우 낮았고 매우 불안정(50%)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 약간 불안정 (23.81%), 보통 (15.03%), 약간 안정적(8.93%), 모름(2.08%)이 있었다. 즉 약 73%의 응답자들이 현 북한정권을 불안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정권 안정성에 대해 연령대에 따라 안정성 평가의 평균 점수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안정성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안정성 평가 척도의 평균을 보면 10대는 3.5, 20대는 2.1, 30대는 2.2, 40대는 2.0, 50대는 1.6, 60대와 70대 이상은 1.5의 수준으로 평가 했다. 또한 이주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주한지 10년이 넘은 경우가 최근 10년 내에 이주한 경우보다 안정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시기별 평가 척도의 평균값을 보면 최근 5년 이내는 2.4, 5~10년 전은 2.2, 10~20년 전은 1.7, 20~30년 전은 1.6, 30년 전 이상도 1.6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를 초기에는 5년 단위, 이후에는 10년 단위로 구분한 것은 선택문항을 과도하게 많이 제시하여 응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초기와 중기 단위로 평가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결과였다. 국내에서도 나타나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미주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하여는 매우 가능(5.8%), 약간 가능(18.6%), 보통(20.09%), 약간 불가능(27.68%), 매우 불가능(24.7%), 모름(3.13%)으로 응답하여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대체로 많았다.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매우불신(62.8%) 혹은 약간불신(18.3%)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북한정권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는 매우 불가능

(48.44%) 혹은 불가능(25.04%)하다는 답변이 대체로 많았고, 보통(13.71%), 약간 가능(8.79%), 매우 가능(1.79%)의 의견은 적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가능(29.61%), 약간 불가능(22.77%) 혹은 보통(15.63%)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매우 불가능(15.03%)하거나 매우 가능(13.69%)하다는 응답은 30% 미만으로 보다 신중한 전망을 나타내었다. 반면 북한의 전면남침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매우 불가능 25.89%, 약간 불가능 26.04%)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필요(매우 필요 60.8%, 약간 필요 20.7%)하다고 응답하였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서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50~70대가 20~40대에 비하여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주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주한지 10년이 넘은 경우가 최근 10년 내에 이주한 경우보다 통일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0.7%) 차지하였다. 한민족 의식이 여전히 통일의 가장 큰 이유로 인식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26.3%)도 비중이 높았다.¹²⁾ 이는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과 모국을 비교하며 가지게 되는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대부분(매우 그렇다 49.77%, 약간 그렇다 29.68%)이었다. 이는 국내 구성원보다 통일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은 재외동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기타 응답으로 인권개선(10.8%), 전쟁위협 감소(10.2%), 이산가족 고통해소(9.6%)

반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체제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는 중국이 개입하여 또 다른 공산정권이 수립될 것(29.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민국 개입(22.64%), 과거 소련이나 중국처럼 일정기간 집단지도체제 성립(20.2%), 김정남, 김정철 등 다른 김씨 일가 형제들이 집권(17.69%)의 응답도 의외로 많았다. 선택된 예시 중에서는 시민혁명이 발생하여 민주적인 정권이 탄생할 것(7.35%)이라는 전망이 가장 적었다. 대한민국의 개입이나 시민혁명으로 인한 민주정권 탄생과 같은 긍정적인 견해보다 공산정권이나 사회주의정권 혹은 김씨 일가의 집권 등의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더 많은 것은, 현 북한정권의 붕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남북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남북한 교류에 의한 점진적 통일(40.6%)이 다수이고, 북한의 붕괴에 의한 급진적 통일(24%), 북한의 개혁·개방에 의한 통일(20.8%),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통일(10.3%), 외부세력 개입으로 인한 강제적 통일(2.2%), 북한 주도의 공산화통일(0.4%)이 뒤를 이었다.

예상하는 통일의 시기는 5~10년 이내(30.1%)가 가장 많았고 15~30년 이내(28.5%), 5년 이내(7.9%), 30년 이후(6.4%) 순으로 많았다. 예상하기 어렵다(24.5%)는 응답과 통일은 불가능하다(2.6%)는 응답도 많았지만 30년 이내 통일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다.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에 대한 답변으로는 예상 외로 미국(35.7%)보다 중국(51.1%)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이어 일본(6.7%), 러시아(4.5%), 기타 국가(1.9%) 순이었다. 이는 미국과 한반도의 지리적 거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인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미주 동포들은 한반도 통일시 남북 주민 간 빈부 격차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41.6%). 그 외 이념갈등(28.8%)이나 무력범죄 증가(14.0%), 지역 간 갈등(11.3%), 세금 납부액 증가(3.0%) 등을 우려하였다. 한편, 통일 이후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발전(36.6%)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또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 정착(23.3%), 분단 극복에 따른 군사비 절감(12.0%), 국가 위상 증진(16.3%), 이념 갈등 해소(10.1%) 등을 언급하였다.

2) 미주 동포들의 통일정책 및 역할 수행 인식

(1) 미주동포들의 한국정부 대북·통일정책 평가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¹³⁾ 모른다는 답변은 약 24% 정도(잘 모른다 19.58%, 매우 모른다 4.1%)였다. 정부 정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 정책을 파악(46.1%)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수시로 인터넷 등을 통해 파악(32.5%)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 한국에서 온 통일전문가의 강연 및 세미나(10.2%),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에서 배포한 정부의 대북통일 홍보 책자(7.5%), 거주국의 언론보도 및 거주국 내 한반도 관련 여론(7.4%) 등의 의견도 있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다(43.3%) 혹은 정책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32.4%)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관심이 없다(8.9%), 정부가 정책의 내용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 같다(8.2%), 북한의 주장과 차별화되지 않는다(6.5%) 등의 응답도 있었다. 기타(3.2%) 의견 중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는 의견도 있었다.

13) 약간 잘 알고 있다(42.19%), 잘 알고 있다(27.92%), 매우 잘 알고 있다(6.22%)

정책 평가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 한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6%(매우 잘함 16.24%, 약간 잘함 20.33%) 가량이었다. 부정적인 답변도 26%(매우 못함 6.53%, 별로 못함 6.53%)를 차지하였으며 보통은 32.47%였다. 정부 정책 중 가장 잘 하는 것은 대북원칙 고수(47.6%), 5·24조치 유지(5.6%)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정부정책의 부족한 면으로는 유연성 부족(24.4%), 대북원칙에 집착(23.7%), 5·24조치 고수(4.1%) 등 정부의 유연성 부족을 꼬집었다. 소극적 교류협력(13.2%)이나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8%), 인색한 대북지원(3.2%) 등 북한에 대한 경직적인 입장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2) 미주동포들의 통일 역할 수행 인식

응답자들의 거주 국가(미국)에서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19.82% 더 높았다.¹⁴⁾ 거주국에서 한반도와 관련한 주된 이슈는 북핵 위협(48.6%)과 북한인권(35%)이 다수였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미만으로¹⁵⁾ 재외동포 역할을 대체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중요도 인식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50~70대가 20대에 비하여 40~70대가 30대에 비교하여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한반도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여론화할 수 있기 때문(3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에서보다 객관적인 시각과 관점 보유

14) 매우 긍정적(14.71%), 약간 긍정적(24.61%), 보통(31.11%), 약간 부정적(15.63%), 매우 부정적(3.87%), 무관심(10.06%)

15) 매우 중요(33.59%), 약간 중요(25.39%), 보통(30.19%), 별로 안 중요(9.13%), 전혀 안 중요(1.7%)

(30.2%), 재외동포가 거주국 정부에 효과적인 외교력 행사(18.1%)가 가능하다는 등의 재외동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꼽았다. 기타 국내보다 국외에서 한반도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6.8%), 통일이 재외동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5.4%)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실제적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외교정책 홍보(33%), 국제사회에 한반도 분단 극복과 관심 유도활동(28.9%), 북한의 비인권적 상황 개선활동(26.8%), 거주국 정부에 대해 한반도 통일지지 요청(9.1%)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미주동포들은 통일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¹⁶⁾ 이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50~70대가 20~40대에 비하여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주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 10년 내에 이주한 경우와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가 통일을 위해 역할 수행할 의향이 통계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사유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본인유학과 본인직장 파견 등이 가족과 배우자의 유학, 본인이민, 부모이민의 경우보다 통일을 위해 역할 수행할 의향이 통계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수행 질문과 관련하여 통일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¹⁷⁾ 미주동포들은 재외동포들이 통일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변 동포들의 관심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43.2%).¹⁸⁾ 이를 위해 재외동포들의 통일을 위한 역할 수

16) 매우 있다(30.8%), 약간 있다(22.6%), 보통(28.68%), 별로 없다(13.93%), 전혀 없다(4.02%)

17) 매우 있다(26.16%), 약간 있다(23.99%), 보통(24.92%), 별로 없다(18.42%), 전혀 없다(6.5%)

18) 기타 시간부족(19.2%), 활동방법을 모른다(17.2%), 예산부족(13%), 네트워크 부족(7%)

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언급하였으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북·통일 정책 수립(33%), 재외동포 통일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26.3%), 한국정부의 정책 이해를 위한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19.7%), 북한·통일 관련 한국사회와 인적·정보 교류 활성화(17%) 등을 꼽았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통일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지원 사항으로는 충분한 예산지원(24%), 유능한 통일강사 섭외(23.7%), 정부 대북정책 설명회 개최(21.7%), 거주국 전문가와 네트워크 형성(17.9%), 주기적인 학술 세미나 개최(11.1%)를 꼽아, 금전적 지원과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실제 활용가능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미주동포들은 거주국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운동을 하는데 있어 미국인이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반도 분단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¹⁹⁾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재외동포들이 통일운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영어로 된 책자 등 정부의 홍보자료(44.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한국정부 지원에 의해 미국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28.9%)나 정기적인 한·미합동회의 개최(26.2%), 한국의 전문가 방문을 통한 미국전문가와의 세미나 개최(15.6%) 등 소통에 대한 갈망도 있었다.

3) 미주동포 통일의식 조사의 정책적 함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통일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주동포들의 거주국 국민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견 피력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활동이라 볼 수 있

19) 미국인들이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30%), 미국인들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 관심이 없다(27.9%), 한국인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24.3%), 미국인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할 방법을 모른다(11.8%)

다. 재외동포의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위해서 상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①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발전할 것이라 예상, ②한반도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 ③현재 한국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평가, ④현재 한국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등 네 가지 변인을 순차입력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5> 재외동포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활동의 상관계수 요약

구분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발전할 것이라 예상	한반도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의 중요도 인식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평가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거주국의 국민(미국인)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408(**)	.451(**)	.357(**)	.286(**)

분석 결과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발전할 것이라 예상이 20%, 한반도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의 중요도 인식이 5%,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평가가 4%,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이해가 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위의 네 가지 요인이 재외동포의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의 31%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재외동포의 통일을 위한 활동의 상관계수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 값의 표준오차
1	.451(a)	.204	.202	1.20010
2	.507(b)	.257	.255	1.16007
3	.541(c)	.292	.289	1.13309
4	.557(d)	.310	.306	1.11982

a 예측값 : (상수),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발전할 것이라 예상

b 예측값 : (상수),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발전할 것이라 예상, 한반도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의 중요도

c 예측값 : (상수),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발전할 것이라 예상, 한반도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의 중요도 인식,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평가

d 예측값 : (상수),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발전할 것이라 예상, 한반도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의 중요도 인식, 한국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평가 및 이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720만 재외동포로부터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재외동포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통일의 중심축으로서 국제사회의 통일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의 여론 선도층을 설득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여 통일의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해당 체류국에서 한국민이 통일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공통일외교를 전개하여야 한다. 통일의 해외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재외동포들은 치열한 국제정치현장에서 한반도 통일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대정부정책 방향 등을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 결과, 연령대에 따라서 재외동포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중요성 인식과 통일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의향에 대하여 50대, 60대 그리고 70대의 인식 수준이 20대, 30대, 그리고 40대에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피력한 적이 있는지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미국인과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서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가 50대, 60대, 그리고 70대와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면 첫째, 재미동포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문 자료 제작 및 주기적인 정부정책 설명회 등 다양한 동포재단 및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대학 및 언론, 종교 등 주류사회와 한인단체 간에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지원책 강구가 시급하다. 셋째, 민주평통과 한인회 및 각종 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글로벌 한인통일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세대들에 대한 통일관심을 제고할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

IV. 글로벌 한인 통일네트워크 구축방안

상기 미주 동포들의 조사결과와 현재 통일을 위한 네트워크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역할과 글로벌 한인통일 네트워크 형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지구촌 통일 프론티어로 인식 제고

21세기에 한민족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은

기존의 타율적인 반강제적 디아스포라와는 다른 차원의 자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디아스포라다. 전 세계 181개국에 거주하는 720만 명 규모의 한민족 이산사회는 세계화 시대에 맞춤형으로 확대된 민족자산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분단된 민족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통일부 등에서 남북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한민족공동체는 초기에는 남북한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의미로 제시되었지만 지금은 남북한과 재외동포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개념이 확대된 것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구소련과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교류가 가능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남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고갈 수가 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상호 간에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적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제일 조총련계 동포가 활발하게 대북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 조선족이 북·중 접경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변경무역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북접촉도 활성화 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고려인으로서 유일한 연방국회의원인 류보미르 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려인 사회를 위한 공헌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 발전에도 공헌을 하고 있다.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해외동포들은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구호 및 식량지원 등 인도적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과거와는 다른 가치 지향적인 삶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왔다. 이제 재외동포들은 새로운 사회에 정착한다는 생존 차원을 넘어서 모국의 최고 국가목표인 통일에 참여한다는 개척자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재외동포들은 글로벌 시대에 통일의 선두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의 통합과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2. 해외 통일·안보관련 단체간 협력 및 국내 연계성 강화

2015년도 기준 재외동포단체는 3,172개다. 이중 통일 및 안보관련 단체는 협의회와 산하 지회를 포함한 민주평통 74개(2015년 7월 기준), 재향군인회 및 각 군 예비역 모임과 참전단체 10개 등 105개의 군 관련 단체, 자유총연맹 등 27개로 전체 3,172개 중 6.4%(206개)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안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다. 다만 인적 구성이 다소 상이하고, 운영 방식도 차이가 있다. 또한 활동 방향과 목표도 미세하게 다르다. 따라서 동포사회에서 이들 단체만이라도 통일 활동을 통합해서 동포사회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한인단체들의 결집을 통해 해외통일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차적으로 이들 단체들 간의 결집을 도모한 후에는 해당단체들과 국내 연계성을 강화하는 2단계 작업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통일운동은 해외에서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따라서 통일안보 단체들은 국내에서 통일운동 방향을 확정하는데 국내 본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통일 및 대북정책의 관 주도 특성상 불가피하다. 민주평통은 서울 사무처에서 기본방향은 전달이 되나 여타 단체들은 비교적 해외 현지의 독자적인 활동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국내외 연계 활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단체들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연초에 단체 대표자들이 동참하여 합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재외동포들이 다수 거

주하는 지역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행사를 개최해도 문제가 없지만 재외동포의 거주자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련단체들이 통합해서 활동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거주국에 주는 파급영향이 크다.

<표 7> 해외 한인단체 현황

단체구분	개수	단체구분	개수
한인회	768	체육	144
종교	395	언론사	131
경제	347	재향군인	105
문화/교류	336	여성	69
복지/봉사	242	통일	61
한글학교	199	정치	22
교육/학술	158	안보	15
기타	180		
총합계		3,172	

주1)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과, 2014.7. 참고

3. 해외 차세대 대상 미래통일리더 육성책 마련

동포 2~3세대들은 부모세대들과 달리 모국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계기가 많지 않았다. 특히 현지에서 태어난 동포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2015년 8월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187명의 2030세대 재외동포 청년들은 평소 본인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6.3%가 한국과 태어난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답했다. 이는 나는 한국인이라고 답한 51.1%의 다음 순위에 해당된다. 특히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답하였다(중앙일보, 2015/8/4).

또한 출생한 거주 국가가 자신의 모국이라는 초민족적인 사고로 인하여 차세대들은 통일문제에 관심이 부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차세대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마인드의 제고방안이 필요하다. 직접 분단을 경험하지 못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인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차세대들을 위해서는 기존 세대와는 다른 맞춤형 통일미래리더 전략이 필요하다. 분단의 비극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차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감성적 접근방법도 지양되어야 한다. 영어 등 해당 세대의 언어로 제작된 통일관련 자료들을 공급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2030 차세대들이 희망적 차원에서 통일에 대해 흥미를 유지하는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차세대들에게 모국의 분단체제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차세대들에게 통일은 미래지향적이며 통일 한반도에서 활동할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신나는 일’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한인회 및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단체에서 차세대 포럼을 개최하고 모국의 분단 상황을 체험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대상의 통일 골든벨 등 참여형 한반도 통일과 역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젊은 층들의 참여 의지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통일공공외교 대사 양성을 위해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등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차세대들은 정보통신(IC&T)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세대보다

우월하다. 상기의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조사에서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39.3%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고 답하였다. 한국은 2005년 이후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확산에 기초한 글로벌 온라인 연결망 구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IT강국 한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차 오프라인 조직망으로부터 온라인 네트워크로 전환되거나 교육·문화 분야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함양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등 기성세대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IT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차세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4. 해외동포 대상 통일문화 사업 강화

다수의 해외동포들은 다양한 이유로 실시간적으로 남북한 분단 상황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모국과 거주국 간에 물리적 측면에서 지리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분단문제를 경험할 구체적인 기회도 다양하지 못해 해외동포들의 통일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동포들에게 통일친화적인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각 한인단체별로 최소 분기별 행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시화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통일이 특정 행사에서만 필요성과 결의를 다지는 일과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동포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인회 및 각종 친목단체에서 통일 관련 사업을 민주평통, 민화협 및 자유총연맹과 연합해서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민주평통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등 관련 기관들이 모국에서 구체적인 통합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통일문화를 혼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거주국에서 재외동포들이 통일을 진정으로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받도록 하여야 한다.

V. 결 론

한반도 분단은 민족 내부의 분할인 동시에 냉전시대 국제정치의 산물이다. 따라서 분단극복은 민족 내부와 외부의 두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민족 내부에서 한반도 통일은 단순한 분단의 극복이 아니라 혈연, 지연, 언어, 문화 및 역사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남북한 간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중립적으로 여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부 재외동포는 전쟁과 분단된 현실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으므로 이 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상실하였던 민족의 동질성과 전통을 오히려 더 잘 보존하고 있어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재외동포의 규모와 역량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자산으로서의 재외동포의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재외동포와 모국 간, 재외동포 상호 간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 역량을 갖춘 각 분야 동포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한반도 통일에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전 세계의 수많은 동포 중 일차적으로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미주동포들의 대북, 통일 인식과 통일을 위한 역할 수행 및 대정부 지원 관련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효율적인 방안 수립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재외동포들은 이민 역사가 1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사회에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거주국 구성원으로서 소수민족의 위치에 있더라도 본인들의 다양한 역할로 체류국의 주류사회에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 재외동포는 모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거주국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존립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을 통해 한반도는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통일의 국제적 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재외동포들은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통일시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의 한 부분을 맡은 그룹이 바로 재외동포들이다. 새로운 공공외교 주체로서의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정책과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 모델의 주체자이며,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에 출입할 수 있어 북한을 개방시키는 통일공공외교의 중요 행위자로 작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의 통일 역할에 대한 연구와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 접수: 3월 23일 ■ 심사: 5월 2일 ■ 채택: 5월 19일

참 고 문 헌

- 문경수. 2000. “전후 재일한국인의 활동과 정체성.” 『전남대학교 개교 20주년기념 국제세미나 학술회의: 21세기 해외 한민족공동체 발전 전략』. 광주: 전남대학교
- 박길성 외. 1996.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 외교부. 2012. 『2013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 _____. 2014a. 『2014 재외동포단체현황』. 서울: 외교부.
- _____. 2014b. 『2015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 _____. 2015. 『해외이주 통계_2014년 자료』. 서울: 외교부.
- 정성호. 2003. 『유대인』. 서울: 살림출판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 프레드 벅스타인(Fred Bugstein) 저·최인범 역. 2003. 『코리아 디아스포라와 세계 경제』. 서울: 국제경제연구소.
- Guehenno, J. M.. 1995. The End of the Nation-State.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heffer, Gabriel. 2003. Diaspora Politics: At Home and Abroa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sch, Linda., Shiller, Nina Glick., and Blanc, Christina.. 1994. Nation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 Basel: Gordon and Breach Publishers.
- 『동아일보』. 2015. “恨이 낳은 성공신화… 눈물의 유배지가 희망의 땅으로.” (8월 5일) <http://news.donga.com/3/all/20150805/72876220/1> (2015/08/20)
- 『미주중앙일보』. 2015. “한국계 기업가 ‘오바마 생일축하해요.’” (8월 5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581235 (2015.08.20)
- _____. 2010. “미셸 박·강석희…한인 사상최대 16명 이상 당선.” (11월 3일)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09423 (2015/11/20)
- _____. 2015. “시진핑, 연변 조선족자치주 방문…북중경협 주목.” (7월

1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7/0200000000AKR20150717019552083.HTML> (2015/11/20)

_____. 2015. “한국계 남편 둔 美 의원, 광복 70주년 축하결의안.” (8월 6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05/2015080504351.html (2015/08/20)

_____. 2015. “노동당 70주년, ‘총북’ 신은미도 평양 입성.” (10월 9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9/2015100902484.html (2015/11/20)

『연합뉴스』. 2015. “시진핑, 연변 조선족자치주 방문...북중경협 주목.” (7월 1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7/0200000000AKR20150717019552083.HTML> (2015/11/20)

『조선일보』. 2015 “한국계 남편 둔 美 명 의원, 광복 70주년 축하 결의안.” (8월 6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05/2015080504351.html (2015/08/20)

『중앙일보』. 2015. “재외동포 대학생 67% ‘재외동포란 이유로 차별.’” (8월 4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87419 (2015/11/20)

『재외동포신문』. 2004. “재외동포 지원사업 주관기관 조정.” (11월9일)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33> (2015/11/20)

_____. 2015 “48개 도시 재외동포 차세대 경제인들 한자리에.” (10월 19일)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124> (2015/11/20)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http://www.nuac.go.kr>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http://www.okf.or.kr>

재향군인회 홈페이지 www.korva.or.kr

한국자유총연맹 <http://www.koreaff.or.kr>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http://www.kcrc.or.kr>

세계한인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okta.net>

ABSTRACT**Case for a Global Korean Unification Network:
A Survey of Korean Americans**

Nam, Sung-wook
(Professor, Korea University)

Overseas Koreans and their advancement into their resident countries' mainstream communities can become an important human capital for enhancing Korea's political and diplomatic status. In particular, overseas Koreans are increasingly active politically within their resident countries, and this not only contributes to promoting Koreans' rights but also to functioning as a useful diplomatic intermediary between Korea and foreign states. This research examines the theoretical and analytical backgrounds of overseas Koreans playing contributory roles in Korean unification. Also, this research proposes a global Korean network which closely links overseas Koreans with their home country while seeking to suggest their widening roles in Korea's unification and overseas opinion formation.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has conducted a survey of one thousand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o statistically determine their perception of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Koreans living in the US are actively and expressively interested in their roles in Korean unification,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Korean network will become a central pivot in forming international sentiments positive to Korean unificat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overseas Koreans on unification to explore their respective roles in advocating for Korea's position will contribute to identifying policy implications and in turn induce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Key words: Overseas Koreans, Korean Americans, Unification, Global Korean Network, Opinion Formation